GMO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 · 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하며, 오늘날 식량 증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이 재배됩니다.  
이러한 gmo에 관해 세계 동향은 ~~~~~이러이러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gmo 표기제 현황은 gmo 표기에 있어 소극적입니다.  
우리나라 gmo 현행 제도~~~~~~설명.

그런데 이마저 면제조항, 잘 지키지 않음 등(사례제시)으로 gmo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gmo 완전 표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gmo 완전 표기제란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함량과 관계없이 그 사용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는 GMO 식품 표시 방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GMO 완전 표기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첫째 GMO를 사용한 제품(gmo원료사용이지만 분해됨에도 불구)이라면, 표기를 의무 시행합니다.  
  gmo는 현재, 안전성이 완전 입증되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gmo개발이 근래이므로 차후 장기적 영향 어떻게 미칠지 알 수 없다.(국가기관의 발언 인용)  
  또한 gmo 연구 결과 (gmo 분해되어 사라진 것 처럼 보여도 소화기관에 분해되지않고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자료)  
즉, gmo를 소량 사용한 식품이라도 gmo표시를하여 소비자의 (알아야 선택할 수 있으므로)선택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이전 법에서 제외된 ~~~~~~~~~ 제품들 포함, 모든 식품으로 범위를 확장합니다.  
     이는 현 gmo 사각지대(면제사항)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우리나라 간장? GMO표기 0인 사례 제시)  
셋째 현 제도 3%에서 1%로 비율을 축소하여 GMO표기제를 강화합니다.  
    gmo 아주 극소량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사례 제시.

이에 따라, GMO 완전 표기제를 법제화 해야합니다.

gmo 표시제 도입  
(식품산업과 소비자의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된다)  
식품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면 국가경제 위기?

식품공업협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GMO표시제" 강화가 설비나 기계의 교체 및 검사비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Non-GMO 곡물프리미엄 발생, 대두 및 옥수수 1차 가공기업들의 생산액 감소 및 이윤의 손실 등을 야기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가격 부담으로 작용할 것.

->반박  
단기적 후생 감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  
사회적 welfare 더 큼

하지만, 이번 연구를 주관한 중앙대학교 진현정 교수는 논문을 통해 "이번 연구는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비용만을 분석한 것이며 이 결과만 가지고 "GMO표시제"의 확대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없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GMO표시제"로 인한 사회 편익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GMO표시제"를 강화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안전성에 대한 대정부, 대식품 기업의 신뢰도 상승, 소비자의 만족도 상승에 따른 후생효과, 사회적 혼란 저감 등 사회적 비용 저감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한 식품의 GMO검사 및 연구시장의 확대에 따른 생명공학 기술 인력의 일자리 창출 등 부가적인 효과도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식품공업협회의 주장대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식품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팔아먹으려는 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일부 식품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기업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GMO" 안전관리와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일부 식품기업들의 자사 이기주의나 싸구려 경제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식품기업 중에서는 GMO 옥수수 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기업이 이미 22개사나 된다. 이들 기업 중에서는 그 어떠한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기업도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정책은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식품공업협회 뒤에 숨어서 "GMO표시제" 를 강화하면 식품기업의 비용 상승만 가져올 것이라 강조하는 시대착오적인 기업들도 있다. 정부의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변화의지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해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워 선진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발목 잡으려는 일부 식품기업의 태도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GMO표시제" 강화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제대로 해보자!

이번에 식품공업협회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진현정 교수는 2008년에 발표한 또 다른 논문에서는 "GMO표시제"를 식품산업 등 국내경제에 최소한 영향을 주고 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역시 "GMO표시제"를 통해 알권리와 선택권 확보에 따른 소비자의 효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GMO 표시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은 "GMO표시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14%까지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사회편익분석 없이 GMO 표시제 강화에 따른 비용 발생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결국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근거도 없는 식품기업의 엄살일 뿐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보다 객관적으로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제대로 된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GMO표시제"의 제정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였다. 현행 제도의 보완에서 시작해 장기적인 "GMO" 안전관리체제의 확립까지 GMO 식품의 안전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이 함께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서울환경연합은 다시 한 번 "GMO"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단기적인 체제개편과 함께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9월 4일

서울환경연합